

2020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0년 5월 1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현 기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신 윤 경제연구원장
	서 명 국 외자기획부장(외자운용원장 직무대행)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결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3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1) 관련부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정하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25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30조원으로,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1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한도 유보분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0.1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5.1조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을 0.1조원으로,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각각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여전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1차 증액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피해기업들을 계속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5월 1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모든 위원들은 소비자들의 외출 자제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매출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 규모와 대상을 적어도 1차 지원 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신규대출은 물론 만기연장이나 대환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금부족에 직면한 업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보다 많은 피해업체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한도를 지난 1차 지원 시에 비해 축소하여 운용할 계획이라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당행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행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분포 및 대출금리 수준,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의 지원자금이 피해업체의 자금사정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행태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최근 발표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월과 4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가파른 대출 증가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현재의 금융경제 상황에서 당행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당행 지원자금의 실제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영업부진과 이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지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하고 3월 동 대출의 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한 이후 5조원의 한도가 두 달 만에 약 80% 소진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액 소진되었는데, 이는 동 대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여타 정책자금에 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범위가 넓고 심사절차도 간편한 점이 동 대출의 한도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자금 가용성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두 달 동안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25조원 증가하였는데 당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자금이 이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취급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여타 금리보다 40~120bp 정도 낮아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분이나 정부의 여타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우량기업들의 현금성자산 선확보를 위한 가수요 등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소진될 경우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제도운영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하게 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조원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 우리나라 명목GDP의 약 1%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대로 우량 중소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20년 5월 18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0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35조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5.1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10.1조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 0.1조원, 총 한도 25조원으로 각각 환원한다.